

‘주먹구구’ 의대정원 조정… 갈길 잃은 의료 컨트롤

총선 이후 의료개혁 담당자 사의 정부, ‘증원 50% 자율감축’ 카드 의료계 “원점재검토 외 복귀없어” 지역민 ‘정부 책임론’ 목소리도 ↑ 전문가 “대통령 직접 답할 차례”

의과대학 정원 증원을 둘러싼 의정갈등 해결이 갈 길을 잃었다. 정부는 총선 이후 내년도에 한해 당초 증원 목표의 절반인 1000명(최소 증원분)까지 줄일 수 있는 대학별 자율 조정안을 제시했지만 의료계는 ‘주먹구구식 대처’라며 제안을 거부했다. 25일부터 의대 교수들의 병원 이탈도 접착되고 있어 의료대란은 더욱 심화할 전망이다. 시민들은 “여기까지 몰고 온 행정당국의 책임”을 강조하며 정부의 적극적인 돌파구 마련을 촉구했다.

21일 의료계에 따르면 총선 참패 후 의료개혁을 추진해 온 정부의 ‘컨트롤타워’는 사실상 멈춤 상태다. 의사 집단행동으로 꾸러진 중대본 수장인 한덕수 국무총

리를 비롯, 대통령실 이관섭 비서실장과 의료개혁을 담당해 온 장상윤 사회수석·성태윤 정책실장이 잇따라 사의를 표명했다. ‘의정갈등 해결 동력’을 잃은 셈이다. 이들의 사퇴 이유는 국정·인적 쇄신이었다.

이 사이 정부는 정국 수습을 위해 ‘증원 50% 자율감축’ 카드를 꺼내 들었다. 지난 18일 강원대·경북대·경상국립대·충남대·충북대·제주대 등 6개 국립대 총장이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에서 대학별 여건을 고려한 신입생 모집안(의대 정원의 50%-100% 범위 내 모집)이 필요하다”고 건의한 내용을 수락한 것이다.

이는 정부가 ‘기존 2000명 증원’에서 한발 물러난 것인데, 배경에는 의대 정원 증원의 큰 틀을 바꾸지 않으면서 대학이 증원분을 조율할 수 있도록 하는 실리적 판단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내년 의대 정원 규모는 최대 1000명까지 줄어들 수 있게 됐다.

정무안이 발표되자 의료계는 일제히 ‘수용 불가’ 목소리를 냈다. 주먹구구식

제안만으로는 현 상황을 타개하기 어렵다는 게 이유다.

임현택 대한의사회 차기 회장은 “이번 결정은 정부가 추진한 ‘2000명 증원’이 얼마나 허술하게 이뤄졌는지에 대한 방증”이라며 “전공의들은 줄곧 ‘의대증원은 부당하고 필수로 패키지가 폐기돼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이 전제가 달성돼야 사태가 풀릴 수 있다”고 말했다.

지역 의료계도 비슷한 의견을 냈다. 익명을 요청한 광주 한 대학병원 전공의는 “의대 정원 1000명 증원도 정말 많은 숫자다. ‘절반 줄여줄 테니 그만하라’고 기만하는 것 아닌가. 정부가 의사들을 ‘정치적 이슈용’으로 활용하는 것 같다”며 “전면 백지화 상태의 재논의가 없다면, 전공의들이 현장에 복귀할 이유는 없다”고 강조했다.

장기화되는 의정갈등에 환자 피해도 계속되고 있다.

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이달 11일까지 전국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는 총 2264건으로 집계됐다. 수술지연이 426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 밖에 진료 차질(119건), 진료 거절(79건), 입원 지연(28건) 등이 뒤를 이었다.

25일부터 의대 교수들의 사직서 효력이 발휘될 예정이어서 의료붕괴·피해는 더 심각해질 전망이다. 지역선 전남대병원(283명 중 92명)·조선대병원(161명 중 43명)에서 사직서 제출이 있었다.

지역민들의 격정도 커져만 간다. 현장에선 해결 동력을 상실한 정부가 되레 사태를 더욱 키우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조선대병원에 내원 중인 한 임산부는 “검진차 방문할 때마다 전문의 없이 썰렁한 병원 모습이 무척 불안했다. ‘총선이 끝나면 나아지겠지’ 하는 기대로 버텼다”며 “그런데 상황이 전보다 더 혼란스러워지는 모양새다. 이전엔 ‘무책임한 전문의’들을 원망했는데, 이제는 오락가락한 정부가 더 문제다. (의사 부재로) 수술이 불가능하다면 자괴감이 클 것 같다”고 말했다.

의료 전문가들은 의대 정원 증원 사태는 이제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할 문제가

됐다고 강조했다.

지역 의료계 관계자는 “국민들이 장기화하는 의정대립에 지쳐가고 있다. 공공 의료도 인력 차출 등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며 “이런 가운데 정부의 ‘의대 증원 50% 자율감축’ 카드는 합리적이지 않다. 되레 본인들의 업무를 대학교 총장에 전가하는 것과 다름없다. 정부가 국정·인적 쇄신을 전명한 만큼 사태 해결의 열쇠를 쥐고 있는 대통령이 현명한 결단을 내리길 바란다. 대한민국의료 붕괴를 막을 시기는 얼마 남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21일 정부의 의료개혁을 구체화하는 역할을 하게 될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에 노연홍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을 선임했다. 특위는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를 골자로 하는 ‘4대 정책 패키지’를 구체화하는 역할을 한다. 다만 대책점에서 있는 대한의사회·대한전공의협 의회의 참여가 없어 ‘반쪽짜리 특위’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정성현 기자 sunghyun.jung@jnilbo.com

70대 노부부에 흉기 휘두른 40대 ‘살인죄’ 적용

이웃인 70대 노부부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A(45)씨에게 살인죄가 적용됐다.

21일 광주 북부경찰에 따르면 전날 70대 노부부를 둔기로 폭행한 혐의(중상해)로 영장실질심사를 앞둔 피의자 A씨의 죄명이 살인으로 변경됐다.

A씨는 지난 18일 오전 6시11분쯤 광주 북구의 한 아파트에서 길을 지나던 B씨(71)의 머리를 흉기로 가격한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당시 B씨의 70대 남편 C씨도 눈에 상처를 입은 것으로 알

려졌다.

A씨는 옆 세대에 사는 B씨 부부에게 평소 불만을 품고 있다가 이런 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된 B씨는 치료를 받던 중 숨졌고, 경찰은 법리를 검토해 살인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범행 당시 A씨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며 판단하고, 폭행치사 혐의보다 더 무거운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정성현 기자

출동 경찰에 흉기 휘두른 50대 구속영장

경찰관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가 구속 기로에 놓였다.

광주 남부경찰은 특수공무집행방해과 폭행 혐의로 50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9일 오후 5시36분께 남구 송하동 한 병원 앞 도로에서 효덕지구대 소속 경찰관 4명을 향해 흉기(톱)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다.

앞서 A씨는 이날 오후 4시51분께 인근 도로에서 일면식이 없는 40대 B씨를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어떤 사람이 누군가에게 맞아 쓰러져 있다’는 주민의 신고를 받고 폭행

용의자로 추정되는 A씨의 자택으로 출동한 상태였다.

검거 과정에서 A씨가 휘두른 흉기에 경찰관 4명 중 3명이 이마와 볼 등에 심한 부상을 입었다.

경찰은 A씨를 제압하기 위해 공포탄 2발과 실탄 3발을 위협 사격했으나 제압하지 못했고, 테이저건을 추가로 발사한 끝에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 동기 등을 묻는 질문에 묵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과 도주 우려를 감안해 A씨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정성아 기자

광주·전남 수요일까지 ‘흐림’… 비 소식도

광주와 전남지역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가끔 비가 내리겠다.

21일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남해상에서 남동쪽으로 이동하는 저기압의 영향을 받아 비가 내릴 전망이다.

예상 강수량은 5mm 미만이다.

내리던 비는 22일 오후 잠시 소강상태를 보이다 23일 늦은 오후에 다시 이어지겠다.

이번에 내리는 비는 낮은 비구름에 의

해 내리며 비의 양은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당분간 아침 기온은 평년(7~11도)보다 높겠다.

22일 아침최저기온은 12~15도, 낮최고기온은 18~21도가 되겠다.

23일 아침최저기온은 9~13도, 낮최고기온은 18~22도로 예측됐다.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좋음’ 수준을 보이겠다. 정성아 기자



54주년 지구의날 광주 행사

광주 시민들이 지난 20일 광주시청 앞 차 없는 거리 일대에서 열린 제54주년 지구의날 행사에서 지구를 둘러싼 일회용품을 수거하는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나건호 기자

‘함성지 사건’ 민주인사 6명 항소심도 승소

유신 독재에 맞서 싸운 ‘함성지 사건’의 당사자들과 가족들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광주고법제2민사부(김성주·최창훈·김진환 고법판사)는 국가폭력 피해를 당한 민주유공자 6명과 이들의 가족 36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소송 원고는 시인인 고(故) 김남주씨와 이강 광주전남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고문·김정길 6·15공동선언 남측대표·김용래·이평의·윤덕연씨와 이들의 가족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죄수사·처벌이라는 공무 집행의 외관만 갖추고 있을 뿐, 실질적으로는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 보호 의무를 위반해 ‘함성지’ 사건 피해자인 원고들에게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가는 피해자와 가족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1심과 마찬가지로 국가폭력 피해자 6명이 ‘함성지’ 사건 직후 경찰의 불법 수사로 대학에서 제적당하거나 교원 임용이 취소되는 등 불이익을 당한 사실을 인정, ‘1심 판결을 취소해달라’는 취지의 국가의 항소를 기각한 것이다.

다만 ‘함성지’ 사건이 없었다면 원고들이 미래에 기대할 수 있는 수입 상실액(일실수입)에 대해서는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생활 지원금을 받은 사실로 재판상 화해가 성립했다고 봐야 한다. 각 원고의 일실수입 청구를 제외한 손해배상 위자료를 상속 분에 따라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전남대학교 학생이었던 고 김남주와 이강을 비롯한 원고 6명은 1972년 12월과 1973년 3월 유신 독재를 강하게 비판하는 선언문이었던 지하신문 ‘함성’·‘고발’ 등을 뿌리며 반독재 민주화 투쟁에 앞장섰다.

이들은 유신 체제에 동조하는 행동을 죽음의 행렬·노예의 길로 묘사하며 끝까지 투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른바 ‘함성지 사건’로 불리운 유신 독재 이래 전국 첫 저항 운동이다. 함성지 사건을 계기로 향후 반독재 투쟁 의지를 결집하는 계기가 됐다.

그러나 이들은 이 사건으로 경찰에 불법 체포·구금(각 구금일 167~284일)돼 고문·가혹행위를 당했다. 국가보안법·반공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가 2021년에야 재심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앞선 1심은 △국가가 국민의 인권 보호 의무를 저버린 점 △국가가 원고들의 인권을 조직적으로 침해해 불법성이 매우 큰 점 △원고들이 사회적·경제적 불이익(대학 제적 처분, 추후 심사에서 교사 임용 취소, 사회적 낙인 등)을 겪은 점 △50년간 배상이 지연된 점 등을 두루 고려해 원고 승소 판결을 한 바 있다.

송민섭 기자